

# 2011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발간사



2010년 우리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현을 목표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리더십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으며, 우리 외교에 있어

또하나의 빛나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발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미국과는 2차례의 정상회담과 최초의 양국 외교·국방장관간 2+2회의를 통해 최상의 동맹관계를 과시하였으며, 중국과는 5차례의 정상급 회담을 통해 정상간 신뢰구축과 함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일본과는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일본이 과거사 현안 진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일·중 3국은 향후 10년간 협력의 청사진인 VISION 2020을 채택하고 상설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설립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해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도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의혹을 제기하여 온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스스로 공개하였습니다. 북한의 UEP는 새로운 핵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서 비핵화 관련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며 또한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하에서 북한 UEP에 대한 안보리 조치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대화를 위시하여 다양한 양자·다자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핵문제, 빈곤퇴치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의 리더십과 모범적인 핵 비확산 의무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발분야에서는 선진공여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식 회원국으로서 적극 활동하고,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의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노력의 지속, 아이티 대지진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 및 아프간 재건 동참 등을 통해 재해경감,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기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EU FTA 서명 및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성장을 위해 아중동·중남미 지역과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협력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과는 2010년중 총 16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광산 확보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출범시키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국제적 확산에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개개인의 실생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외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연간 출국자 1,300만명 시대를 맞아 해외안전여행 홍보를 강화하고 남아공 월드컵 기간중 현지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낯선 곳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워킹

홀리데이 협정,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을 확대하는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21세기 첫 1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10년을 맞아 외교통상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표어를 내걸고 세계화, 디지털 혁명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앞서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외교백서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한국 외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 외교통상부장관 김 성 환

<b>차례</b>		
	<b>1. 2010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초</b>	<b>008</b>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010
	제2절 외교정책 기초	018
	<b>2. 한반도 안보 공고화 외교</b>	<b>022</b>
	제1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024
	제2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031
	제3절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039
	제4절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048
	<b>3.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외교</b>	<b>066</b>
	제1절 신아시아 외교	068
	제2절 유럽 지역외교	078
	제3절 중남미 지역외교	091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101
	제5절 지역간 외교	111
	<b>4. 경제·통상 외교 강화</b>	<b>118</b>
	제1절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체제 구축	120
	제2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127
	제3절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146
	제4절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외교	150
	제5절 양자·다자 통상외교	155
	제6절 통상투자진흥외교	179

	<b>5.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b>	<b>184</b>
	제1절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186
	제2절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198
	제3절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217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228
	<b>6. 영사 서비스 확충</b>	<b>236</b>
	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238
	제2절 해외진출 우리국민 편익 증진	250
	제3절 대국민 소통강화	256
	<b>7.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 구축</b>	<b>260</b>
	제1절 인사·조직 개편	262
	제2절 외교역량 강화	266
	제3절 외교역량교육 및 평가제도의 내실화	270
	<b>부록</b>	<b>272</b>
	1. 외교통상부 조직도	274
	2. 외교관계 수립 현황	276
	3. 재외공관 현황	278
	4. 국제기구 가입 현황	280
	5. 경제통상 관계 현황	283
	6. 2010년 조약 체결 현황	285
	7.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288
	8. 재외동포 현황	290
	9. 해외이주 현황	291
	10.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292
	11. 2010년 국제관계일지	293

# 1.

## 2010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010

제2절 외교정책 기조 018

## 제1절

## 국제 정세 개관

## 1. 국제 정치 정세

## 1) 개관

21세기 국제질서는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위축,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NGO 등 새로운 행위자의 부상 등으로 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에는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 중·일간 및 러·일간 영토 문제, 신흥국들의 역할 확대 등이 기존 국제 정세의 변화 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제·군사적 급성장에 따라 동북아 역학구도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미국과 중국은 지역적·국제적 현안을 둘러싸고 협력과 견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율문제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G20이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관리 체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움직임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2010년 12월초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몇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총회결정문 형태의 '칸쿤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로써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필요한 협상 동력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4월 핵안보정상회의 및 5월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등 주요 군축·비확산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미·러간 New START 조약이 서명되는 등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 2) 지역별 동향

미국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반테러·비확산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진 배치 외교(forward-deployed diplomacy)'를 통해 경제 통합 및 지역 안정 노력에 적극 참여하였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최근 국제경제위기 극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역동적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일·중은 5월 정상회의에서 사무국을 한국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협력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이질성 및 역사·영토 문제, 북핵 문제 등 잠재적 협력 장애요인 역시 병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은 2010년 제17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 연계성에 대한 ASEAN 마스터플랜」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ASEAN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태국과 캄보디아간 영토분쟁, 남중국해 관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부 동남아국가간 갈등은 상존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에 ASEAN+3, ASEAN 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협의체가 다층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가입하면서(기존 ASEAN, 한·일·중·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서남아 지역 정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0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인도의 국제정치적 위상 증대이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에 대한 경제지원 강화를 통해 경쟁국인 파키스탄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운영을 주도하는 등 서남아 지역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통합은 작년 그리스 재정위기로 약화 조짐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의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에는 단일통화 안정성 확보 노력, 'Europe 2020' 경제 전략 채택 등으로 통합이 강화되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차원에서도 2010년 11월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신전략 개념'에서 회원국 간 협력이 강조되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2008년 3월 콜롬비아 무장반군(FARC) 게릴라 진압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군의 에콰도르 영내 기지 공격 후 단절되었던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및 베네수

엘라간 외교관계가 정상화의 진전을 보였다. 또한 2009년 발생한 온두라스 쿠데타 및 미-콜롬비아 군사기지 사용 협정체결을 둘러싼 역내 국가간 갈등이 진정되어가는 기미를 보였다.

아울러, 브라질 등이 남미국가연합(UNASUR),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같은 역내 협력기구에서 활동을 강화하면서 역내 국가간 통합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이념적 차이 및 주도권 경쟁 등으로 통합에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2010년 5월 가자 구호선단 폭격, 10월 정착촌 건설 동결 해제 등의 조치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란 핵문제는 유엔 안보리결의 1929호,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라크는 2010년 3월 총선 실시 이후 정부 구성에 9개월여간 난항을 겪은 끝에, 2010년 말에야 말리키 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2010년 17개국<sup>1)</sup>이 독립 5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사하라 이남에서 국가형성, 경제개발 및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sup>2)</sup>은 여전히 달성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는 무력충돌이 현저히 감소되어 지역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 2. 국제 경제 정세

### 1) 개관

2010년 세계 경제의 핵심 화두는 경제회복이었다. 2010년 약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세계 경제는 상반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속도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이 약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주도한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약

3%의 성장률에 그쳐 신흥시장과 선진국간 회복세에 차이를 보였다.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그 향방이 매우 불투명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우려되었던 보호무역주의는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경제 질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신규의제 개발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환율전쟁의 확산방지와 거시경제 공조, 국제금융기구(IMF)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외제 분야에서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 이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 의견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었으나,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수준 높은 정상 선언문이 도출되어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이 부여되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바, 2010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292건에 이르며, 이중 23건이 2010년에 추가되었다. 세계 경제위기 회복과정에서 주요국들은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EU와의 FTA 서명 및 페루와의 FTA 타결 등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0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연중 69-90달러 사이의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평균 78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경기회복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확산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008년 상반기까지 급등하던 국제 곡물가격은 2010년 상반기 공급증가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곡물 생산국의 기상재해와 이에 따른 곡물수출 제한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1)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 차드, 콩고, 가봉,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DR콩고, 소말리아, 토고

2) 코트디부아르에서 바그보 대통령이 2010년 11월 대선 결과를 무시하고 권력이양을 거부함으로써 2개 정부가 대치하는 내전 위기가 발생

## 2) 지역별 동향

미국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을 꾀하는 신통상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였다. 이러한 수출확대 정책 이외에도 양적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미국은 2010년 하반기 2.6%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났다.

중국 경제는 수출 확대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2010년 10.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 위안화는 2010년 6월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발표 및 '통화바스켓 제도' 운용 재개 이후 점진적으로 절상되어 왔으나, 국제사회로부터의 절상 압력은 여전하다. 중국은 12차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통해 내수와 수출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6월 중국-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결 이후 양안간 무역투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2009년 12월 신성장전략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평균 성장률 2%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0년 실질 GDP 성장률 3.9%를 기록하였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디플레이션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9년 경제성장률이 -7.9%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중 하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2010년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를 벗어나 성장의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2010년 안정적인 경제성장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ASEAN 회원국중 6개국은 2010년 1월부터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등, EU식 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중이다.

2009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EU 경제는 2010년 0.5% 성장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보여주었다. 한편, 회원국 재정에 대한 사전적 감독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 경제는 원자재 수요 확대, 1차 농산품의 국제가격 상승 및 내수 확대, 각국의 거시경제 안정 등 내부 체질 강화에 힘입어 브라질의 7.7% 성장을 비롯, 평균 약 6%의 성장을 달성하여 2009년도 세계 경제위기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신속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2009년 11월 두바이 사태 이후 중동국가는 서구자본이 아닌 오일머니를 주로 활용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2010년 성장률은 4%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경기부양은 지속될 전망이나 중동 지역내 반정부 시위 확산이 지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는 2010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4.7%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전 성장률을 회복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의 지속적인 자원 수요 및 투자 증가, 일차산품 가격의 강세에 힘입은 바 크다.

## 3.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유엔 헌장,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G8, 정상 선언문, ARF 외교장관회담 의장 성명 등의 채택을 통해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가들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거나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6자회담 정체국면이 지속되었다. 특히, 북한이 11월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은 북핵문제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은 새로운 핵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우려 사안으로서, 북한의 핵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9.19 공동성명에도 배치된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공조 하에 북한 UEP에 대한 안보리 조치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대화를 위시하여 관련국들 간 다양한 양자·다자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6자회담 사전여건 조성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향후 재개되는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실질

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한편 북한은 대내적으로 선군정치의 기초하에 김정일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후계 체제 조기구축을 도모하였다. 9월 28일 당대표자회의에서 북한은 노동당 재정비를 통해 김정일의 통치 권력을 재확인하였고,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후계과정을 사실상 공식화하였다.

북한 경제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실패 이후 거래위축, 물가폭등 등으로 인해 2010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의 경협 확대를 추진하는 등 북·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대내적으로 경제회복에 주력한 결과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아울러 건강보험개혁법안, 금융개혁법안, 감세연장안을 통과시켰으나, 높은 실업률로 인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에 패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테러, 비확산, 중동 평화, 북한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강화 차원에서 한·미 동맹 및 미·일 동맹 강화는 물론 인도·호주·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한·미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중국은 국내 정치 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2010년 10월 제17기 5중전회시 경제발전 방식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민생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5개년(2011-15) 개발규획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중·미 전략경제대화 지속, 중국·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세계 경제위기 극복 관련 능동적 역할 수행 등 각국과의 협력을 증진하면서 국제 문제에도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상하이 엑스포 및 11월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해 대외적인 위상도 높여가고 있다.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칸 나오토 민주당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다음 달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칸 총

리는 일본이 태평양에 접한 해양국가임과 동시에 아시아 국가라는 양면성을 고려, 미일 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한편,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 영토문제로 인해 갈등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북한문제 관련, 일본은 북한의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을 강력규탄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러시아는 2009년부터 경제위기 극복과 에너지·원자재 의존경제를 탈피하기 위해 경제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실리 추구의 전방위 외교정책을 양자·다자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10년에 미국, 중국, EU, 인도 등 주요국과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특히 미국과는 2010년 4월 전략핵무기 보유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New START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란 핵, 북한 핵,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였다. 중국과는 2010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러·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BRICs(브라질·인도·러시아·중국) 등 다자협력체제 및 신흥 경제 대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시켰다.

## 제2절

## 외교정책 기초

2010년 외교통상부는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해 정상외교 지평 확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공고화, 글로벌 네트워크 지속 구축, 경제활성화 촉진을 지속추진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외교정책 기초하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 1. 한반도 안보 공고화

2010년에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였다. 또한, 북한은 그간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2010년 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심각한 우려를 야기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남북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다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미국과는 최상의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행위 대응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최초의 외교·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 관련 유엔 안보리 및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일본·중국·러시아측 6자 회담 수석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5자간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2. 정상외교 지평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아시아 외교를 본격 추진한 데 이어 아중동·중남미·EU 지역으로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심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인도·ASEAN·EU와의 전략적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정상교류를 통해 자원·인프라 개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를 내실화하였다. 중남미 및 아중동 지역 신흥시장 국가들과는 경제·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강화 및 문화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집중 전개하였다. 또한, 한·일·중 3국간에는 상설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하고 과학, 노동, 치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3.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우리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확정된 이후 대통령 직속의 G20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정상외교 및 각종 고위급외교를 통해 G20 외교를 펼치는 한편, 통상교섭조정관을 G20 대사로 임명하여 비G20 국가 및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지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거시경제 공조, IMF 쿼터 및 국제금융규제개혁 등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서울개발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등 국제경제협력의 핵심 포럼으로서 G20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4. 경제·통상외교 강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즈음하여 무역자유화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지속적 성장동력을 창출해내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 합의를 도출하고 한·EU FT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유럽·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페루와 협상을 타결하고, 호주·콜롬비아·터키 등 국가들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걸프협력회의(GCC),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의 포괄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UAE 원전수주를 계기로 원전수출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우리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의 국제 전파의 일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출범을 통해 이론적 체계화 및 개도국과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 5.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외교 수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2010년에는 ODA 선진화,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체계화, 해외긴급구호 선진화를 위한 국내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아프간지방재건팀(PRT) 사무소 운영을 개시하고 아이티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11월로 예정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제 설정, 홍보전략마련, 행사준비 등 모든 과정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6. 영사서비스 확충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제도 등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집중 전파에 주력하였다. 특히, 스웨덴·덴마크·홍콩·대만과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들의 해외진출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대국민 직접 접촉활동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 7. 외교역량 강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교환경과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업무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교통상부는 직원들의 외교역량 강화와 외교 인프라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특히, 2010년 10월 김성환 장관 취임 이래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채용평가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운영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에 주력하였다. 한편, 현실에 맞게 특수지 체도를 개편하고, 다양한 외교역량 개발·교육·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